

# 광주 자치구 경계조정 '뜨거운 감자'로

## 편입대상 주민·기초의회 반대 등 갈등 심화 지자체는 뒷짐만... 성과없이 마무리 가능성도

광주시 자치구 간 경계조정이 지역별로 찬반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등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타 자치구 편입 가능성이 접쳐지는 북구·광산구 일부 지역 주민과 지역의회는 반대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는 반면, 동구는 경계조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어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다.

◇ '3가지 안 압축 안 한다'... 김빠진 최종 용역보고회= 광주시는 9일 오후 3시 자치구간 경계조정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한다.

광주시는 지난 1월 경계조정 용역에 착수해 지난 8월 27일에 중간보고서를 통해 소폭·중폭·대폭 등 3가지 개편 시안을 제

시했다.

1안인 소폭 조정안은 북구 6개 동(문화동, 풍향동, 두암 1·2·3동, 석곡동)을 동구에 편입하는 안이다.

2안인 중폭 조정안은 소폭 조정안인 1안에 광산구 첨단 1·2동을 북구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추가했다.

대폭 조정안인 3안은 '북구 12개 동(중흥 1·2·3동, 중앙동, 임동, 신안동, 문화동, 풍향동, 두암 1·2·3동, 석곡동) 동구 편입', '광산구 2개 동(첨단 1·2동) 북구 편입', '광산구 5개 동(월곡 1·2동, 운남동, 신흥동, 우산동) 서구 편입', '서구 풍암지구 남구 편입' 등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광주시가 최종용역보고회

때 2안인 중폭 조정안을 일부 수정해 발표한다'는 이야기가 나돌았으나, 광주시는 이를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기존 3가지 안을 하나로 선택·압축해 발표하지 않고, 설명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마련한 경계조정 최종 개편 시안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시안이 마련되면 준비기획단 논의, 시·구의회 등 정치권 협의 등을 거쳐 조정안을 확정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다.

◇ 지역별 찬반 '뿔뿔'... 갈등 확산 우려 =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불분명하자 찬반 갈등이 지역별로 확산하고 있다.

자치구 간 경계조정에 가장 적극적인 것은 급격한 인구 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동구다.

동구청은 "인구 기준으로 광주의 8% 정도밖에 안 돼 교부금 받을 때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왔다"며 균형발전을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반면 북구와 광산구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북구는 시안에 따라 동구 편입대상이 되는 6개 동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거는 등 적극적으로 경계조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북구 의회에서 "북구 8경(景) 중 5경이 동구로 편입되는 안이다"며 반대 의사

를 밝힌 의원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광산구에서는 구의원들이 "자치구간 경계조정 개편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역민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폭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안 기준으로 볼때 남구 편입대상이 되는 풍암지구에서는 주민 설명회에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로 치부하는 분위기다.

주민과 구의원들이 '아우성' 치는 데에 반해 각 자치구는 '뒷짐' 지는 형국이다.

북구청과 광산구는 각각 '주민들이 의사에 따르겠다'고만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민 의견이 워낙 첨예해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최종안이 결정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자치구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 경계조정이 특별한 성과도 없이 흐지부지 마무리 될 가능성도 내 놓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현재 지역별로 손익을 따져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각 주민과 기초의회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미지수다"며 "이 상황에서 광주시가 최종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해도 행정부에서 지역갈등이 첨예함을 의식해 주민 투표하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관·고훈석 기자

# 상무지구 미관광장 주차장 법정 다툼 가나

## 광주도시공사, 운영업체에 소유권 이전 소송 해당 업체 "일방적 해지 부당" 맞소송 예고

광주도시공사가 민자협약 특혜 논란이 일었던 광주 상무지구 미관광장 주차장 사업 운영 업체인 P사와 협약을 해지하고 주차장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P사 측도 도시공사의 일방적 협약 해지가 부당하며 맞소송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광주도시공사는 8일 "지난 8월 '상무지구 미관광장 주차장 민자유치 협약'을 해지하고 같은 달 말까지 주차장 명도이전과 운영 중단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이 석 달째 이를 수용하지 않아 이날 광주지방법에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상무지구 미관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1995년 참여업체가 미관광장 지하에 1천 50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 20년 사용 후 광주도시공사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으로 시작했다.

도시공사는 같은 해 지역 중견 건설사 3곳과 첫 협약을 한 이후 3차례 협약 변경 등을 거쳐 주차 규모를 지상과 지하 각각 절반으로 나눠 건설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준공 기한도 애초 1997년에서 2014년 말로 연기됐다.

하지만 P 업체는 지상 주차빌딩 건립시한인 2014년이 되자 주차수요 부족을 이유로 건립을 2020년까지 연기해달라고 도시공사 측에 요구했다.

이어 2016년에는 지하주차장 운영과 지상 주차빌딩 건립 분리 타당성 검토를 요

청했으나 협약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도시공사는 수년간 협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데도 업체 측에 주차장 건립 촉구 공문만 보냈을 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특혜 논란을 키웠다.

광주도시공사는 P 업체에 지난 7월 말까지 사업계획서와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냈으나 P 업체 측은 이를 지키지 못했다.

결국 도시공사는 지난 8월 이사회에서 P 업체와 '상무지구 미관광장 주차장 민자유치 협약' 해지를 결정한 데 이어 이날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P 업체 측에 8월 말까지 주차장 명도이전과 운영 중단을 요구했으나 수용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상대측도 맞소송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전남경찰,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종합훈련** 전남지방경찰청은 테러로부터 안전한 전남을 위해 지난 7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관기관과 합동 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경찰특공대 31사단, 무안소방서, 무안경찰서 등 6개 기관에서 헬기, 제독차량, 장갑차, 폭발물처리 차량 등을 동원해 실제상황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제공

# 학생 사이버폭력 급증... "전담 상담센터 개설해야"

광주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집단 괴롭힘(사이버불링) 등 사이버폭력이 급증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이경호 의원은 8일 시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광주에서 발생한 학생 사이버폭력 가해 건수

는 2015년 69건, 2016년 81건, 지난해 12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이버폭력 백신 앱을 시연하며 사이버불링 유형을 설명하기도 했다.

사이버불링이란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괴롭힘을 뜻하는 불링(bullying)이 합쳐진 말이다.

단체 대화방에 초대된 뒤 욕설을 퍼붓는 '떼까', 피해자가 대화방을 나가도 계속해서 초대하는 '키득감옥', 반대로 대화방에 초대된 뒤 참여자들이 동시에 퇴장하는 '방폭' 등 개념을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가정과 학교가 연계한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이버불링 전담 상담센터도 개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었던 A씨는 지난 7일 오후 광주 서구 번화가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문득 운전 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전에 알던 인근 마사지 가게 사장 B(35)씨가 몰고다니던 고급 승용차가 떠올랐다.

술자리를 마친 오후 11시 50분께 B씨의 마사지 가게를 찾아가 A씨는 B씨가 벗어 둔 옷에서 차 열쇠를 훔쳐 나왔다.

/윤규진 기자 jin2001@

# 무면허 음주운전 20대 여성 차량 잇따라 '깡'

훔친 차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벌인 20대 여성이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박아 경찰에 들미를 잡았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A(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마 업소 여성 종업원

운전면허도 없이 호기롭게 운전대를 잡은 A씨는 차를 출발한 직후 좁은 이면도로에서 있던 보행자 C(29)씨의 옆 허리를 사이드미러로 치고 지나갔다.

C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놀란 A씨는 도망가기로 마음먹고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았지만 50m도 채 가지 못하고 주차돼 있던 차량 3대를 들이박은 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186%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운전면허도 없이 호기롭게 운전대를 잡은 A씨는 차를 출발한 직후 좁은 이면도로에서 있던 보행자 C(29)씨의 옆 허리를 사이드미러로 치고 지나갔다.

C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놀란 A씨는 도망가기로 마음먹고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았지만 50m도 채 가지 못하고 주차돼 있던 차량 3대를 들이박은 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186%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원산지 인증제도는 가공식품이나 음식점에서 단일 국가산 원료를 95%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식재료 원산지  
**한국산**  
100%

농림축산식품부

원재료 원산지  
**한국산**  
100%

농림축산식품부

## 국가가 인증·관리하는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 인증제도 시행

인증대상	인증기준
<p><b>가공식품</b> :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 및 가공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p> <p><b>음식점등</b> :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리 및 제공하는 식품점(객업·휴게 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및 집단급식소</p>	<p><b>가공식품</b> : 품목을 기준으로 비합비 중 95%이상의 원재료가 동일한 국가산일 경우</p> <p><b>음식점등</b> : 전체 식재료 중 95%이상의 식재료가 동일한 국가산일 경우</p>
<p><b>인증절차</b></p> <p>인증신청 : * 접수 및 심사(인증기관) * 인증 표지 및 현판 사용(신청인)</p>	<p><b>인증표시</b></p> <p>제품, 포장, 메뉴판, 간판 등에 원산지 인증 표시 가능</p>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